

# K-Policy 브리프

## 미-중 다자주의 경쟁과 ‘깁 국가’ 한국의 외교전략

2021.9.27.

이 신 화 고려대학교 교수, 한국유엔체제학회장

### < 요약 >

1. 다자주의(multilateralism)의 이론과 실상
2.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(LIO)의 전개와 한계
3.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
4. 미·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
5. ‘깁 국가’ 한국의 전략적 선택



**K-Policy Platform**

[www.k-pol.org](http://www.k-pol.org)

요 약

- ▶ 미·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, 전략적 목표, 이행과정의 전략이 다르고 양 강대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호 배경의 레토릭과 도구로 다자주의를 동원하고 있음
- ▶ 양 강대국의 짝짓기 경쟁 속에서 ‘선택의 순간’에 처한 국가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으나 국제 민심, 특히 인태 지역 국가들은 일단 미국 쪽으로 쏠리는 추세임
- ▶ 무역과 기술영역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있는 서방 국가들이 미국 주도 민주주의 동맹과 클린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동맹에 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
- ▶ 많은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,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(LIO)를 대체할 국제질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진 않음
- ▶ 전방위적으로 치열해진 미·중 경쟁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고,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및 이익을 공유하는 친구국가들과의 다자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임
  - 따라서 쿼드 및 파이브 아이즈 확대 과정에 동참할 기회를 잡고, 미국 주도의 ‘기술 생태계’ 재편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
- ▶ 글로벌 차원에서 미·중 사이에 깁 국가들과 다자주의 연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‘중견국의 순간’을 잡아야 함
- ▶ 지역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사이 ‘실용외교’를 구사하기 위해 소다자 안보협력체들을 주도적으로 추동해야 함
- ▶ 국내적으로는 외교 포폴리즘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국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
  - 또한 남북관계나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외교를 도구화하지 않고 한반도를 뛰어넘어 글로벌 다자무대에서 국익과 국제공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‘외교 프로페셔널리즘’을 고취해야 함

## 1. 다자주의의 이론과 실상

- ▶ 다자주의(multilateralism)란 셋 이상의 국가가 다양한 입장과 정책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루는 제도를 통해 국가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력 질서를 정립하는 것임
  -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국제사회에서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대표적 국제 기구는 국제연합(유엔)임
- ▶ 다자안보(multilateral security) 협력이란 셋 이상의 국가가 세계평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안보 정책을 조율하는 외교적 행위로, 이론상 동맹안보(alliance security)와 구별됨
  - 19세기 전반기 유럽협조체제는 다자주의가 적용된 초보적 다자안보레짐이라 할 수 있고, 1975년 구축된 유럽안보협력기구(CSCE)가 유럽안보협력기구(OSCE)로 발전된 것은 대표적 다자안보협력 사례임
  - 반면, 동맹안보는 냉전기 소련 주도 공산진영에 대항하여 미국과 서유럽이 조직한 북대서양 조약기구(NATO) 처럼 적대국보다 우월하거나 유사한 군사력을 통해 위협을 억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▶ 다자주의를 내세운 다자안보협력, 다자연합, 다자동맹 등의 용어는 사실상 혼재하여 사용되어왔고, 학문적으로도 통일된 용어 정의가 부재함
- ▶ 실제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평가가 많음
  - 유엔의 경우,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의 제도화에 상당 부분 이바지했지만, 강대국 정치에 휘둘리거나 회원국 간 ‘국익 각축장’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
  - 국가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무역이나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한 다자 간 협상은 합의 및 규범제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음
- ▶ 미·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, 각자 추구하는 다자주의의 의미, 전략적 목표, 이행과정의 전략이 다르고, 양 강대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호 배격의 수단(tool), 핑계(pretext), 레토릭으로 다자주의를 동원하고 있음

- ▶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소수의 국가가 중단기적으로 맞춤형의 다양한 소다자 협력’(minilateral cooperation)을 추진하고, 장기적으로 이의 중층적 연계를 통해 광범위한 다자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대안이 주목받고 있음
  - 소다자 협력체는 3~4개 국가가 다자협력체보다 특정화된 메커니즘 안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좀 더 유연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더욱 확실한 집단행동을 취할 수 있음
  - 여러 소다자 안보 그룹이 일시적이거나 상호 배타적일 경우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
- ▶ 미·중 다자주의 경쟁 심화로 한국을 비롯한 ‘깬 국가들’은 두 개의 다자무대 중 택일해야 하는 딜레마가 커짐
  - 다자주의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 국가가 상호협력하고 합의하여 국제 분쟁이나 공동위협을 평화롭고 효과적으로 해결해간다는 점에서 중견국들(Middle Powers)이 선호함
  - 미·중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중견국의 존재와 역할이 위축되고 양자택일의 압박이 커지고,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리더십 실종의 G-제로 시대 국제관계의 불확실성 속에 중견국 연대의 필요성과 유효성이 주목받고 있음

## 2.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(LIO)의 전개와 한계

- ▶ 자유주의 국제질서(Liberal International Order: LIO)란 전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로 다자주의적 속성을 띠며
  - 전후 자유주의 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의 대전략은 공산주의에 맞서는 선봉장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되, 자유주의 이념 수호와 민주주의 가치의 확산 및 열린 경제시스템과 다자무역체제 구축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었음

-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통한 국제통화기금(IMF)와 세계은행의 발족, 1945년 유엔설립, 1947년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플랜, 1949년 NATO 출범 등을 통해 LIO가 확립됨
- ▶ 탈냉전기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며 LIO에 대한 의구심이 커짐
  - 미국의 탈냉전기 대외관계에 있어 ‘진정한’ 다자주의를 구현한 것은 클린턴 행정부(특히 1기) 시기뿐이라는 평가가 있음
  - 반테러전에 올인하며 미국은 각 국가나 지역 고유의 특성 및 인종과 종교를 둘러싼 갈등을 간과한 채 외형적 민주제도를 이식하려 함. 그 결과 이라크,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사회적 혼란과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LIO의 적실성이 흔들리게 됨
- ▶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내부적 분열 조짐도 LIO에 위기를 초래함
  - 브렉시트(영국의 유럽연합 탈퇴)와 트럼프 집권기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과 보호주의 및 동맹과 국제기구 무시 행태, 유럽에서의 반이민·반난민을 표방하는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은 LIO가 지향하는 다원주의와 다자주의 정신을 퇴보시킴
- ▶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리더십 역할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함
  - 유엔을 중심축으로 한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회복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천명함
  -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미국은 인태지역을 전략공간으로 한 중국견제를 핵심적 대외전략으로 삼음. 기존의 양자 동맹과 더불어 한미일 및 미일호 3각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, 우방국과 전략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새로운 다자 이니셔티브나 다자협력체 형성에 집중함
  - 미국의 이러한 다자적 접근은 중국의 부상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 문제에 미국 홀로 대응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반증함
- ▶ 다양한 차원의 동맹지향적 소다자 안보협력력을 확대하고 있음

## 미·중 다자주의 경쟁과 ‘끼 국가’ 한국의 외교전략

- 냉전기 소련을 겨냥하여 영미권 4개국과 함께 구성한 파이프 아이즈(Five Eyes)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다자 안보협력체임. 최근 미국은 탈냉전기 중국견제용으로 지속되어온 이 ‘앵글로 색슨 정보동맹’에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함
- 쿼드(Quad, 미, 인, 일, 호 4개국 안보협력체) 역시 중국을 겨냥한 소다자 안보 협력체로 지역주의적 요소가 뚜렷함. 미국은 한국, 뉴질랜드, 베트남을 포함한 ‘중다자동맹’ 성격의 ‘쿼드 플러스’ 구상을 구체화하고, 기후변화, 기술 등 비전통안보 이슈로 의제를 넓혀 중국을 ‘의식하는’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
- 최근 군사 및 기술협력을 위한 미-영-호 3국 협력체인 오커스(AUKUS)를 공식 출범시킴. 이는 브렉시트 이후 ‘글로벌 영국’ 전략을 추진하며 인태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영국의 이해관계와도 부합됨. 이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은 반중 노선의 선봉에 선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함
- ▶ 미국 중심의 소다자적 집단안보체제 형성 움직임은 미·중 대립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LIO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미·중 지정학적 경쟁이 충돌하는 기제로 변질될 수 있음
- 미국의 다자주의는 여러가지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중국견제를 위한 다자주의 동맹전선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음
- 이러한 미국의 다자적 접근을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 비판하는 중국은 북-중-러 관계 강화를 통해 반(反) 쿼드 연대를 모색하고,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맞설 ‘반(反) 제재 국가 모임’ 결성에 북, 중, 러의 참여를 제안함
- ▶ 미국의 ‘선별적’ 소다자 동맹강화 움직임은 LIO 틀에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함.
- 프랑스는 AUKUS로 인한 호주와의 핵잠수함 계약파기에 대해 동맹의 투명성과 신뢰관계의 파괴라며 강하게 비난하며 미, 영, 호 3개국과의 갈등을 가시화함.
- EU도 사전협의를 없었던 AUKUS 결성을 비판하며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함

### 3.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

- ▶ 중국 외교는 다자주의보다 양자주의를 오랫동안 견지해옴
  - 1949년 건국한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은 다자적 국제기구를 제국주의 연합이 세계잠식을 위해 만든 도구이자 자국 억제수단으로 보고 배척함
  - 1971년 대만을 대체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(안보리) 상임이사국이 된 이후로 중국의 다자주의를 불신하는 시각은 줄어들지 않음
  - 1980년대까지는 국제제도 틀이나 작동과정에 대한 이해가 적었고, 다자적 합의 과정이나 다자기구에 참여하는데 여전히 소극적이었음
- ▶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개방적, 포용적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법적 구속력 없는 느슨한 연성 다자주의를 내세움
  - 중국은 집단안보를 추구하는 서구의 안보동맹을 ‘냉전의 유물’이라 칭하며 반대하면서 포괄적 협력안보를 강조함
  - 미국과 달리 분명한 동맹국이 없는 중국은 다자협력이 국익에 부합할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,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양자적 힘의 관계를 모색하는 기회주의적 경향의 전략적 다자주의를 구사함
- ▶ 2000년대 들면서 중국의 다자외교나 다자적 접근은 미국 견제 및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더욱 활발해짐
  - 중국 다자주의의 목표는 해외자원을 확보하고 ‘앞마당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국가 외교정책의 핵심과제와 맥을 같이함
    - 따라서 중국은 경제적 부상과 재정적·인적 기여를 통해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 옴
  - 다자기구 개편이나 개설에 한계를 느낀 중국은 ‘China+’ 형태의 자체적인 지역기구와 중국 주도의 다자협력체 형성이나 발전에 집중함
    - 이 다자간 협력체들은 많은 경우 지역주의적 특색을 보이고, 전략적으로 미국을 배제하고 있음(예: 상하이 협력기구(SCO), 일대일로(一帶一路) 전략,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RCEP),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, 보아포럼)
  - 2001년 9/11 이후 테러와의 전쟁,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, 트럼프 시기 국제

## 미·중 다자주의 경쟁과 ‘깬 국가’ 한국의 외교전략

기구·협약 무시 등으로 인한 ‘미국의 빈틈’을 중국은 국제기구와 다자외교 무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는 전략적 기회로 활용함

- ▶ 중국은 미국의 독선적인 대외정책을 비난하고 다자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과 다자협력을 통한 국제분쟁 갈등 조정을 강조하였으나, 국제사회의 대중 불신이 커짐
  - 중국의 다자주의는 국제기구 내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연결된 거미줄 형태가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, 작동하는 자전거 바퀴 형태를 띠고 있음
    - 이는 시진핑 주석이 비판해온 미국이 중심에 서고 아시아 국가들이 양자적으로 연결된 ‘허브-바퀴살’(hub and Spoke) 체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도 있음
  - 더욱이 자국에 비판적인 국가에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고, 남중국해에서 공격적 수위를 높이고, 코로나19와 관련한 일련의 중국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국제사회는 중국의 다자주의 이니셔티브들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임

## 4. 미·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

- ▶ 양 강대국의 짝짓기 경쟁 속에서 ‘선택의 순간’(moment of truth)에 처한 국가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으나, 국제 민심, 특히 인태 지역 국가들은 일단 미국 쪽으로 쏠리는 추세임
  - 남중국해 문제, 한국과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, 홍콩·신장웨이우얼 문제 등에서 보듯 중국이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한 채 자국 이익과 입장 투사를 위해 군사·경제적 힘을 통한 포식자적 행동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크기 때문임
  - 코로나19 발발 이후 세계 주요국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이 급증함. 중국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신도 미국, 일본 및 서방 국가들의 리쇼어링(reshoring, 해외 진출 제조기업의 국내 회귀) 혹은 동맹·파트너국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공급망을 구성(ally-shoring)하는 정책을 재촉함
- ▶ 무역과 기술영역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있는 서방 국가들이 미국 주도 민주주의 동맹과 클린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동맹에 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



- 팬데믹 위기 속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(FDI)가 이뤄진 곳은 수십 년간 1위를 고수해온 미국을 제친 중국이었음
- 주요 7개국(G7) 정상회담에서 지도자들은 정치·군사적 이슈뿐 아니라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해 강경 입장을 표명하면서도, 정작 공동성명서 내용에는 공통과제에 대한 공동이익이 있을 경우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
  - 따라서 리쇼어링이나 기술적 디커플링(탈동조화) 정책을 통한 미국 주도의 LIO가 자칫 정치적 수사에 그칠 우려가 있음
- 양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군사력, 경제력 경쟁보다 더 치열하게 전망될 것으로 보임
  - 미국 주도의 클린 네트워크(Clean Network)와 중국 주도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(全球数据安全倡议)는 누가 글로벌 데이터 안보표준을 주도하느냐를 둔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임
- ▶ 아프간 철군으로 인한 일련의 사태는 글로벌 리더십의 귀환을 내세운 바이든의 다자주의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비판을 초래함
- 미국은 동맹국들과 사전조율 없이 철군하고, 탈레반의 급속한 장악도 예측하지 못함.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직후 한국, 대만, 일본, NATO에 대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. 미국 안보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커짐
  - 이는 바이든의 동맹 결집과 강화를 통한 대중(對中) 견제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
- 미국의 탈 중동 전략이 성공하더라도 아프간에서의 인권탄압과 인도적 위기상황이 심각해질 경우, 중국을 비롯한 비자유주의 국가보다 도덕성, 인권수호와 같은 규범 면에서 우월하다는 점을 내세워 자유주의 패권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
- ▶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친중 성향의 파키스탄, 아프간 및 반미 국가 이란으로 이어지는 반미 연합지대 형성 기회를 얻음
- 장기적으로 볼 때 이슬람 이념의 통치체제를 구현하려는 탈레반이 자신들과 같은 수니파 이슬람인 위구르족에 대해 탄압을 일삼고 종교를 아편으로 치부하는 중국 공산당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임

## 미-중 다자주의 경쟁과 ‘깁 국가’ 한국의 외교전략

- ▶ 많은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, 미국 주도 LIO를 대체할 국제질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진 않음
  - 지난 75년 이상 LIO 속에서 시장경제, 자유무역, 민주주의,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성장과 번영을 구가한 국가들 사이에 LIO를 보완하여 지속발전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란 공감대가 큼
  - AUKUS 등이 동맹국·우방국 내 반발을 불러일으켜도, 정작 이 소다자협력체가 활동할 지역인 인태지역 국가들은 이를 중국의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위협에 대응할 적절한 집단방위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
  - 4차산업혁명과 ICT 시대 여러 국가가 반도체, 소프트웨어, 첨단기술 등에 대한 미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, 상당 기간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

## 5. ‘깁 국가’ 한국의 전략적 선택

- ▶ 전방위적으로 치열해진 미-중 경쟁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고,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및 이익을 공유하는 친구국가들과의 다자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임
  - 전략적 모호성을 버려야 함: 바이든 정부의 대중(對中) 견제강화를 위한 다자주의 동맹이 추진되면서 미국의 동맹 서열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
    - 한국이 안미경중(安美經中)식 전략적 모호성을 보인다면 미국 동맹연대 서열에서 밀려날 수 있음
    - 그때 그때 이슈에 따라 이익을 쫓는 전략은 미중 모두가 외면하거나 공격하는 상황을 자초할 수 있음
  - 지속적인 신뢰를 주는 동맹이 되어야 함: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유사시 미국과 빈틈없는 안보 공조를 위해 ‘동맹의 의무’를 지키고, 영국, 호주, 일본처럼 지속해서 신뢰를 주는 동맹이 되어야 함
  - 미국 주도의 경제, 군사, 기술영역의 다자동맹 네트워크에 편입하고, ‘깁 국가

들'과의 협력연대를 구축하여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함: 국제 판세를 읽고 다수의 동지(like-minded) 국가들이 선택한 민주주의 다자네트워크에 때맞춰 확실하게 안착하여 한국의 지분을 확보해야 함

- 중국의 보복성 제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나 '차이나 포비아'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
- 긴 국가 간 연대협력 강화(예: 한-호 2+2 장관 회의)를 통해 대미협력으로 인한 피해 방지나 보호를 위한 미국의 확실한 지원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

○ 쿼드 파이브 아이즈 확대 과정에 동참할 기회를 잡아야 함: 쿼드 협의체 내 백신, 기후변화, 신기술과 관련한 워킹그룹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

- 특히 기술 워킹그룹의 참여는 선진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배제되거나 뒤떨어지는 상황에 부닥치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함. 또한, 파이브 아이즈 참여는 국제질서를 주도할 최고 수준의 정보공유 네트워크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

○ 미국 주도 반도체 생태계 재편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지분을 확보해야 함

▶ 글로벌 차원에서 미·중 사이에 긴 국가들과 다자주의 연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'중견국의 순간'(moment of Middle Power)을 잡아야 함

○ 미·중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양국 모두 자기 편 국가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, 중견국 연대는 수적 우세와 단결된 목소리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잡아야 함

▶ 지역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사이 '실용 외교'를 구사하기 위해 인태지역 내 소다자 안보협력체들을 주도적으로 추동해야 함

○ 다양한 소다자적 지역협력 메커니즘을 추동해야 함: 인태지역 내 다자협력체 구축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, 다양한 소다자 안보협력이 중층적인 연계를 이루어 다자주의로 발전한다면 동맹과 상호보완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

- 예를 들어 한국은 한미일, 한중일, 한미중 등 소다자 협력관계의 역학 구도를 한미동맹과 다른 다자협력관계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음

## 미·중 다자주의 경쟁과 ‘깁 국가’ 한국의 외교전략

- 이에 더해 호주, 아세안국가 등과의 소다자 안보협력을 통해 미·중 각각의 네트워크가 가진 ‘구멍’을 찾고, 양 네트워크를 잇는 교량 역할을 모색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함
- 신항안보 의제나 틈새이슈를 다룰 맞춤형 소다자 안보협력체의 활성화가 중요함
  - 기존의 국제기구나 다자협력체는 이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역내 중소국가들이 다자주의 질서 형성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이 힘들
  - 따라서 신항안보 의제나 틈새이슈를 찾아내어 맞춤형 소다자 협력틀을 구성함으로써, 이 틀 속에서 전문성과 적실성 면에서 강대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함
- ▶ 국내적 차원에서 미·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양분화를 막기 위해 외교 포폴리즘을 극복해야 함
  -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국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: 미·중 사이에서 깁 국가의 전략적 선택은 불가피한 현실임을 인정해야 함
    - 중국의 도전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대처해 가야 할 공동과제라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함
    - 그 과정에서 정권의 성격과 지도자교체에 상관없이 건국 이래 견지해온 ‘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’의 정체성, 가치 및 이념이 흔들린다면 국익이 보장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함
  - 남북관계나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외교를 도구화해서는 안 됨: 국내 정치와 이념이 대외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외교 포폴리즘을 경계해야 함
    - 한반도를 뛰어넘어 글로벌 다자무대에서 진정한 글로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익과 국제공헌의 균형을 맞출 수있는 ‘외교 프로페셔널리즘’을 고취해야 함



**K-Policy Platform [www.k-pol.org](http://www.k-pol.org)**  
**Tel 070-8787-0202 Email: [admin@k-pol.org](mailto:admin@k-pol.org)**